

# 지방이 국가 성장 이끈다…‘5극 3특’ 국토공간 대개조

정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위한 ‘지방시대’ 청사진 제시  
행정수도 완성·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도 구체화  
삼성·현대차그룹 서남권에 575조 투입 ‘균형성장 빅딜’ 기대

정부가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국토 공간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는 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3·5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비수도권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대규모 재정 지원이 동반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전력의 핵심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5개 초광역 경제권(5국)과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것이다. 각 권역이 독립적인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다핵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을 아우르는 '메가특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 특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 운영된다.

지방시대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이 마련한 140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이 비수도권에서 실현되도록 '기업과 정부의 균형성장 빅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각 450조원과 125조 2000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서남권에 스마트가전·AI 및 그린수소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계획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파격적인 '지방대학 육성책'이 제시됐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카이스트(KAIST)나 포스텍(POSTECH)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서울대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대학을 육성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설명했다.

국도 공간의 물리적 재설계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30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을 203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추진되는 '2차 국도공간 이전'은 단순한 기간 배치를 넘어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이동하는 클러스터형 이전을 원칙으로 삼았다.

권역 내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광역철도와 도로망을 정비하고, 통합환승 시스템인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 거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재정 분권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국제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7대 3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2026년 10조6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집중 흐름을 완전히 되돌리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분권과 균형발전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mailto:jusbh@kwangju.co.kr)

**‘4세·7세 고시’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법 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아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교과외에 학적·불합격자를 기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고급 필요부 장관 또한 지난 10월 이 같은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해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5극 3특으로 맞춤형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KTX-SR 통합 '급물살' ... 호남선 주말 하루 4600석 늘다

국토부, 통합 내년 말까지 완료  
중복 비용 절감·운임 10% 인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이 내년 말께 완료되면 호남 고속철 좌석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교차 운행과 차량 회전을 향상을 통해 호남선에만 주말 1일 기준 4600석 이상 좌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기관 통합 완료 전이라도 '운영' 부문 통합을 우선 추진해 고속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KTX-SR  
기관 통합 기대효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사가  
통합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교차 운행할 경우 주말

1일 기준으로 전국 고속철도 좌석 수는 총 1만 6690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송정역을 포함한 호남선은 서울역 출발편

이 882석, 수서역 출발편이 3802석 늘어나 총 4684석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호남선 전체 좌석 수(5만5272석) 대비 8.5% 늘어나는 셈이다.

경부선은 1만127석이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경전선 372석, 동해선 1316석, 전라선 191석 등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코레일 측은 통합 시 중복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통해 고속철 운임을 최대 10%까지 인하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정의원은 “고속철도 통합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오랜 숙제였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전한 기관 통합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교차 운행이나 예매 시스템 통합 같은 운영상의 조치는 조속히 시행해 호남선 등 구간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농촌의 겨울 ... “아프지 말아야 한다”	▶6면
팔도 건축기행 - 경기도 포천아트밸리	▶18면
KIA, 골든글러브 ‘빈 손’ 되나	▶22면

# 전남의 모든 일자리 쉽게 찾고, 쉽게 구하자!

## 전남일자리정보망

#일자리상담

#취업준비

- 1 민간·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 2 이용자 편의를 최적화한 맞춤 검색 기능 지원
- 3 일자리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접수
- 4 구직자를 위한 취업준비스서비스 지원(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 연습)

정보망 QR코드

오늘, 전라남도 일자리는 8,008 건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 ▾ 을 대상으로 하는

강진 ▾ 지역의

취업 ▾ 분야

지원사업을 추천 받고 싶어요

조건에 맞는 지원사업 검색 →

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자리정보망 Jeonnam

일자리정보망 ☎ 061-750-7722